



우체국 “바쁘다 바빠”

설(26일)을 10여일 앞둔 15일, 서광주우체국 직원들이 소포를 분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광주우체국은 설 특수를 맞아 평소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5천여의 소포를 처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 광주·전남 4대 현안사업 해결 정부·지자체·지역민 힘모아야

세해 들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뉴딜과 신성장동력을 비롯한 대형 개발계획과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세계를 앞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도 호남고속철 조기완공과 5+2 광역경제권 수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 지역 최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남고속철 조기완공과 5+2 광역경제권 수정·보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광주 R&D특구 지정, 자동차 부품산업단지 조성, J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호남고속철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종환 국토부장관이나 최근 광주시를 방문한 배극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공약기간 내에 완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2012년 완공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와 관련 광주시

- ❶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 ❷ 5+2 광역경제권 수정
- ❸ 광주 문화산업 육성
- ❹ J프로젝트 차질없게

와 시의회, 민주당 광주시당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공약실행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2 광역경제권의 경우 호남권에서 전북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역 재조정 요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선도산업 추가선정 또는 R&D특구 지정과 같은 특단의 선도프로젝트를 마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지역민의 관심사다. 광주시는 올해 문화수도 조성의 기초가 되는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

부에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지난 정부의 역점사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10월 영암에서 개최될 F1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F1대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지원법’제정에 재동이 걸려 있다. 전남 서남권 관광개발과 지역 자동차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F1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스포츠 이벤트로 깎아내리려는 일부 정부부처의 시각이 결집되며 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현안사업이 활력을 얻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각종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사업의 성과를 가르는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 실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지역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정부와 협의를 통해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전남을 방문,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서남해안 관광레저기반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

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전남 조선업체에 대해서도 자본 및 경영관리 확충 등을 통한 자구노력 선행과 첨단 및 친환경 선박을 주력 선종으로 선택하는 등 기술 및 기격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전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 업체들이 3~4년간의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일시적인 발주량 감소나 선거 하락에 대응할 여지가 충분한 만큼 선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조선 획일적 구조조정 안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기술력 등 고려 선별해야”

정부와 금융권이 과잉투자와 자금 난을 이유로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 구조조정이 설비축소나 인력감축 위주로 진행될 경우 조선업 전반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따라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가능성과 기술력,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 기사 3면〉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5일 ‘전남지역 조선업 동향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조선업 구조조정이 성장 잠재력이나

기술력보다 설비축소 위주로 진행될 경우 1980~90년대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몰락한 일본 조선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일본 조선업계는 1979년과 1987년, 조선수요 위축에 대비해 35%와 20%의 공급능력을 감축하고

1999년 설비확장을 자체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공격적인 설비확장으로 맞선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주도권을 넘겼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전남지역 조선업은 지역적·산업적 여건상 지역 전략산업으로 잠재력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기반 인프라 조성과 숙련기술인력 확충, 관련 기자재산업 육

성이 밝힌 바 있다”며 “내년도에 치러질 2011학년도 입시 기본사항은 6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가 대입 업무를 대교협으로 이양하면서 불거진 3불 정책 폐지 전망과 거리가 있는 결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입 정책 유지 방침을 2012년까지도 제한한 것이 그 이후에 3불 정책 폐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대입 ‘3不 정책’ 2012년까지 유지

### 대교협 정기총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입 ‘3불(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이 2012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2012년 이후 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160여 4년제 대

학 총장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2012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2012년 이후 폐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 총장은 “올해 치러질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입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전년도 입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3불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심 산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 F1 대회 지원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사업계획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초불시위와 경제 위기 등으로 지난해 6월과 11월, 12월 등 세 차례나 연기됐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명박 대통령 오늘 광주·전남 방문

### 시·도 신년 업무보고



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에 대한 의지와 J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입장은 밝힐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역경제권 핵심 선도 산업 보완 요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 것인가도 관심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역경제권 핵



지구촌 구석구석...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전합니다